▶ 도의회 경제산업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심사

창업 · 기업지원예산 유사 중복성 질타

김현철 "취업지원 실효성 떨어져… 기술창업 7억 예산에 14곳"
강용구 "투자유치 부서별로 제각각… 태스크포스 팀 신설 필요"
백경태 "창업꿈나무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사업과 연계 필요"
양용호 "도민 금융교육 예산지원 필요성 설득력 떨어진다"
이현숙 "청년 관련 신규사업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 경제산업국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각종 창업예산과 기업지원분야 사업의 유사 중복성 논란이 불거져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24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정농단과 연계된 예산으로 지목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예산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창조경제센터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이 중복 특혜논란과 지원 종료 후 퇴사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아 사업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의원

김 의원은 또한 "9억 원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의 경우 기술창업 지원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특히 올해 7억 원의 예산이 기술창업 분야에 지원됐지만, 지원대상은 12곳의 창업기업과 2명의 창업자에 그쳤다"고 사업실적 대비 과도한 예산편성을 꼬집었다.

강용구(남원) 의원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와 사업이 각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국가별 투자유치 전략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투자유치 태스크포스 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용구 의원

이어 일회성, 전시성 행사예산과 각종 교육예산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매우 큰 각종 행사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점포형태가 아닌 일회성 특판행사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승인 시 향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신규편성 사업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도내 각 출연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경태 의원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내용에는 우수아이템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어 별도의 예산편성보다는 각 기관들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연결해 지원해야 더 효과적이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동차기술원, 에코섬유연구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시제품 제작을 기본업무로 하는 출연기관의 사업 외에 별도의 14개의 개별사업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어 상당부분 중복이 불가피하다.

백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소,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기술애로 해소지원 등 시제품 제작지원 대상기업과 범위의 중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통폐합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인 도민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금융경제 교육 등 금융상식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문제예산으로 삼았다.

양용호 의원

이현숙(비례, 민중연합당) 의원은 "청년 축제, 소통 프로그램, 직무 인턴 등 청년 관련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보다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신중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

/고민형 기자

"최순실-정유라, 반드시 국회에"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은 24일 최순실·정유라·최순득 등 특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24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청문회장에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이미 국조특위 실시 계획서상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못박았다.

그는 "불출석 증인은 검찰 고발은 물론,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동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국회 모욕죄를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출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수감 중인 증인들이 국정조사 출석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또한 일반 증인들이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잊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21일 일반에 공개된 기억교실은 2019년 건립예정인 4·16안전교육시설 내에 추모공간으로 이전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새만금 카지노 법안 폐기해야"

정의당 도당 "안종범 · 김종 연관 의혹"

새만금 카지노 유치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카지노 유치를 뼈대로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과 국민의당은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새만금에 복합관광리조트 유치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같은 당 정동영, 조배숙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카지노 유치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카지노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전 차관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짙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카지노의 추진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또 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전주갑) 의원에게 "사행성 조장과 가정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폐해와 후유증을 몰고 올 '악 덩어리 카지노'를 새만금에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박 대통령 탄핵, 민주당에 '꽃놀이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다음달 2일 또는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로드맵을 전격 공개했다. 탄핵 추진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 비박계를 포섭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당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등을 고려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 체제의 무력화를 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대선 국면까지 대여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돼도 장기적으로 보면 별반 나쁠 게 없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등 탄핵 주도한 야당이 대여(對與) 공세에 주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난 여론은 탄핵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부결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돌리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게 분명하다. 나아가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주도하며 국민적 분노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향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민주당에겐 '꽃놀이패'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민주당의 기대대로 내년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느냐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순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다른 대형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할 경우 여론의 초점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과 대선 출마 여부,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판이 급변할 경우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손익계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지금의 탄핵 국면을 마냥 즐기고만 있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BUAN 600th Anniversary
1416-2016
부안 정명 600주년 행복부안! 천년도약!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